



보건복지 규제개혁 추진동향

—본고는 그동안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규제개혁과제 및 행정명령 합리화의 내용을 총정리한 것임.—

1. 보건복지 규제개혁 추진개요

-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세계화추진위원회(1996년 5월 10일)에서 규제개혁 시범부처로 지정함에 따라 생활개혁차원에서 민간여론을 수렴하여 국민편익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21세기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민간제안 561건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자체 발굴한 1,259건 등 총 1,820건을 최종 심의하여 그 중 143과제를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하여 1997년 8월말까지 71과제를 완결하고, 72과제는 계속 추진·연구중이다.
- 보건복지관련 행정명령 1,013종(본부 448종, 소속기관 565종)에 대하여 민간인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심사분석팀에서 국민편익 증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행정명령 규제합리화 작업을 추진하여 그 중 180과제를 폐지 또는 정비키로 심의·확정하였다.

2. 규제개혁과제의 주요내용

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 보장

- 의료보호환자의 급여상 불평등 해소
 - 투약기간을 1회 5일분에서 의료보험 환자와 같이 6일분으로 연장하고, 귀

향·요양 등 특수한 경우 1회 수일분 또는 장기간 투여 가능토록 조치(1997년 3월)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의 확대실시
 - 정신지체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생아에게 무료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1인당 소요비용 8,640원) 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연간 555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 건강보조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품목류 제조 정지로부터 제조업소 영업정지로 대폭 강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996년 12월)하고, 위반자는 15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지침을 제정·시행(1997년 3월)
 -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사전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함(건강보조식품협회 및 식품공업협회에 심의위원회 설치: 1997년 2월).
- 식품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
 -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업종별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성분별로 6~12개월에 1회 이상)
 - 영세업소를 위한 검사 대행기관을 동업자 조합, 대학, 국공립 연구소 등으로 확대(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개정: 1997년 1월)
- 기타 수입식품검사제도의 개선, 예방접종사업의 개선 등 14과제를 완결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나. 국민편익증진 및 의식개선

- 무료 노인복지시설 이용체계 개선
 - 무료 노인복지시설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 저소득 노인도 실비로 이용가능(노인보건복지법 개정: 1997년 7월)
- 입양절차의 합리적 개선
 - 보건복지부, 아동상담소 및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던 입양대상 아동의 적격여부 판정을 시·군·구청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로 단일화
 -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외이주시 입양대상아동 적격여부 판정은 폐지하고, 양부모만이 적격여부를 판정

- 청소년 남용약물 관리방안
 - 청소년이 남용할 우려가 있는 진해거담제 등 일반의약품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약사법시행규칙 개정: 1997년 5월)
 - 특별관리의약품 지정 및 1회 판매 허용량 설정(1회 450mg: 1997년 2월)
 - 판매규제대상 남용의약품 지정고시(브롬수소산 텍스트로메트로판 단일제)
 - 초·중·고교 교과서에 약물남용 예방내용을 수록하고,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
- 장묘제도의 개선(강화)
 - 묘지 면적의 축소, 사용기간 설정, 화장장려, 장례식장 및 납골시설 보급 등을 통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을 해소
 -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식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97년 9월)
- 기타 국민연금수급권자의 산재보험 수급사실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전산확인으로 대체, 의료보험증 검인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연장,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기관 승인제도 폐지 등 15개 과제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다. 보건의료산업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

-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개선
 - 화장품의 할인판매관행(40~50%)과 가격불신을 바로잡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결정하여 표시토록 가격표시제도개선(1997년 5월)
- 공중접객업소 허가제도 개선
 - 숙박·목욕·미용·이용업 등 공중접객업소의 개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신규업소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 1996년 8월).
- 의약품 등 허가제도 개선
 - 신약허가에 민간참여 확대, 임상시험용 의약품제조를 제3자 시설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함.
 -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업계의 자율성 제고로 경쟁력 강화(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1997년 7월)

- KGMP제형 추가 절차를 약전제형별 39개 소분류제형 평가에서 6개 단위 제형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1997년 1월)
-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제도 개선
 - CT는 설치승인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MRI는 의료보험적용과 동시에 제외토록 하여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1997년 1월)
- 기타 의료용구 등급분류체계 개선, 의료용구의 등급별 제조·수입품목 허가관리 차등화, 의료용구 임상시험관리제도의 개선, 의약품 등 품질검사제도 및 재평가제도 등 24과제를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라. 산하단체 및 민간단체의 자율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제도 개선
 - 개인·종교단체 등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 완화(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7년 7월)
- 의료보험조합 보고·승인사항 폐지
 - 국외근무자 보험료부담 경감, 자격·보험료·보험급여관련 서식 간소화(의료보험법시행규칙 개정: 1997년 6월)
 - 보험료 수납 및 급여비 지급 업무의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위탁, 법인세법에 의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율 산정 등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제도 폐지(의료보험법시행령, 조합운영규칙 개정)
 - 직원 징계 의결결과 보고, 조합감사의 감사처리 결과보고, 조합재산 상황검사 실시계획, 검사결과와 조합통보, 고정자산의 재평가계획서 사전제출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제출의무 폐지
 - 임직원재정보증서 제출, 상임 대표이사의 장기간 관외 출장 사전통보, 임직원의 국외 출장 및 귀국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조합운영규칙 개정: 1997년 6월) 등 18과제를 개선함으로써 단체의 자율성 제고

3. 행정명령 규제합리화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명령 1,013종(본부 448종, 소속기관 565종)을 모두 심사분석하고 법률적 근거마련이 부적절한 경우나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조항을 폐지 또는 정비하기로 하여 그중 규제 관련조항 475건 중 180건을 전문폐지, 일부폐지, 완화, 강화하기로 하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비키로 확정함.

〈정비키로 결정한 합리화대상 규제건수 : 180건〉

(단위: 건)

구 분	계	훈 령	고 시	예 규	지 칙	기 타
소 계	170	47	37	10	39	37
전문폐지	53	2	5	3	8	35
일부폐지	15	9	5	-	1	-
완 화	66	30	15	1	20	-
강 화	6	1	2	1	2	-
추후조치	30	5	10	5	8	2

주: 총 180건 중 규제일몰제 추진 과정에서 각 실·국별로 개정조치 완료(1997년 10월 1일부로 140건에 대하여 규제일몰조치 실시)

□ 주요내용

- 행정명령중 준치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보건복지부 전자계산 조직운영 규정,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규정,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승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월별 주요사업 및 행사계획 보고 등 53건을 전문폐지함.
- 의료·약사·위생관련 단체에 의한 회원사 감시업무를 명실상부한 자율지도업무로 바꾸고 자율지도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업무와 자율지도원에 대한 서약서징구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의료·약사·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칙).
-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이용자의 70% 이상이 지역내 공적부조대상자 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함(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
- 적출물 처리 비용에 따른 최고액 및 최저액을 폐지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을 유도함(적출물관리지침).
- 국립정신병원 입원시 의료보험환자 본인, 보호자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공 등 15건은 일부폐지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한 6개기관에 대한 복지부 감사실시 주기를 2년에서 2~3년으로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감사준비를 위한 행정수요를 줄임.
- 노인시설 입소대상을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무의탁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의 130%) 노인까지 확대함(노인복지사업지침).

- 입소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이용 절차를 간소화함(노인복지사업지침).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법인의 기타 수익용 기본재산의 종류에 투자가치가 있는 재산이 포함되도록 완화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활성화를 유도함(사회복지사업법인의 기타 수익용 기본재산의 종류 고시).
- 의료보험 진료비심사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이의신청기간을 행정심판법에 맞추어 90일 이내로 연장함.
- 항암면역요법제의 보험급여를 평생 60일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120일까지 보험급여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식품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입식품 등의 검사지침에서 동일사 동일식품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출시 이를 인정함.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국내 제품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스티커 대신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label)의 경우는 허용하여 표시사항의 변경에 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포장지 인쇄비용의 과다소요를 막을 수 있게 완화함.
-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배치 현황보고, 위임사무에 대한 결과보고,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훈련보고, 장애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실적보고 등 각종 보고업무의 횟수를 줄여 행정능률의 효율화 및 업무간소화를 위해 66건을 완화함.

4. 향후 추진계획

- 1997년내 전체 규제개혁과제(143건)의 약 80%(111건)를, 1998년에 31건을 완결토록 추진하고 보건복지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규제합리화 작업은 일몰조항(Sunset Clause)의 적용을 통해 조치완료 예정임.
- 시범부처에서 수행한 상기 개혁추진 내용과 실적을 1997년 12월말까지 규제개혁백서로 발간하여 향후 타부처 규제개혁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개선후 본부 각국,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행정명령과 규제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1997년 12월말까지 각각 편람 발간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종합보고할 예정임.

대분류	소분류(Package)		과 제 명	비고
경쟁력 있는 국가	민원업무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의 병급조정 대상자 확인업무 개선 직장의료보험증 검인제도 개선 	완료 완료
		규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진료승인 폐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완화 식품 등의 재검사제도 개선 제품검사 개선 입항 통지의무 개선 무연분묘 개장 허가 완화 소독업 허가신청서 서식 변경 유족의 범위 완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 간소화 	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개선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승인 심사제도 개선 의료용구 등급분류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절차 개선 의료용구의 검사제도 개선 의약품등 허가제도 개선 의약품 재평가 제도 개선 의료용구 임상시험 관리제도 개선 신의료기술의 수가신설 절차 간소화 의약품등 품질검사제도 개선 의약품 관리 전산체계망 구축 마약전산 처방전 인정 방안 가정의례업소 지도개선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규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선 기기의 검정 완화 위생용품 자가품질기준검사 기관지정 확대 위생용품 제조업 등록중 수어피제 삭제 위생용품 자가품질 규격기준검사기관 지정 폐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수련, 인력기준의 수정보완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완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개선 위생용품의 자가검사 및 기록보존 완화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폐지 검사업무 규정 및 변경승인 폐지 검사업무 정지 폐지 목욕장업 허가 완화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대분류	소분류(Package)		과 제 명	비고
경쟁력 있는 국가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규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 허가 완화 ○ 이미용업 허가 완화 ○ 조건부 영업의 허가 폐지 ○ 시체운반업 허가 폐지 ○ 연질캡셀 성형위탁업소 지정취소제도 완화 ○ 연질캡셀 성형위탁업소 지정제도 완화 ○ 시설모지 등의 관리비 및 사용료고시제 완화 ○ 수강료 승인 폐지 ○ 의료보호진료비의 시·도지사 심사지급 폐지 ○ 제품검사의 표시 개선 ○ 마약 사용내역 기록장부 비치 완화 ○ 대마취급 자격상실자의 인계승인 완화 ○ 처방전 기록의 작성·비치시 확인절차 완화 ○ 항정신성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불합중지로 폐지 ○ 항정신성의약품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완화 ○ 항정신성의약품 품목원료 사용 승인 완화 ○ 항정신성의약품 학술연구사항 보고 폐지 ○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 불합중지로 폐지 ○ 마약사용 허가사항 변경신청 폐지 ○ 마약사용 허가신청 폐지 ○ 마약의 도매보고 폐지 ○ 마약의 소매보고 폐지 ○ 마약판매서, 구입서 보존 등 완화 ○ 마약취급 자격상실자 소지마약 신고절차 폐지 ○ 생산실적 및 판매사항 보고 폐지 	<p>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완료 추진중</p>
			자원낭비 방지	제도 개혁
더불어 사는 사회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개선¹⁾ ○ 청소년 남용약물 관리방안¹⁾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의 개선방안 ○ 아동복지수용시설 입소자격 기준 개선 ○ 보건복지분야 이용시설 종합화 ○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 관리방안 ○ 보호작업장에 대한 임금보조정책 실시 	<p>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연구중</p>
		규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소유 의무폐지 	완료

대분류	소분류(Package)		과 제 명	비고
더불어 사는 사회	장애인, 노인복지 향상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노인복지시설 이용체계 개선 ○ 유료 노인복지 주택활성화 방안 ○ 장애인 자동차관련 민원업무처리의 효율화 방안 ○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차별금지법 등의 개정 ○ 장애인서비스기관의 지역적 균형 배치 ○ 보장구(장애인편의보조기구)활용촉진 방안¹⁾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지원방안 마련 	완료 완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연구중
단란하고 건전한 가정	단란한 가정유지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절차의 합리적 개선 ○ 생계유지 인정기준 개선 ○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절차 개선방안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대책 ○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¹⁾ ○ 공적연금간 통산제도 도입방안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및 보험료 부과 등급 개선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개선 	완료 완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연구중 연구중 연구중
	건전한 가정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묘제도의 개선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방안¹⁾ 	추진중 추진중
건강한 삶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품질검사제도 개선 ○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 ○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관련 광고 사전 심의제 도입¹⁾ ○ 국민영양조사 체계 및 조사내용 개선방안 ○ 식품중 제품검사제도 개선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규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품질검사 완화 ○ 니트로소아민의 검정 폐지 ○ 수입식품 등의 검사제도 개선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일부 완화 	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환자의 급여상 불평등 해소방안 ○ 국외 근무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의 확대 실시 ○ 예방접종사업의 개선 ○ 60세 이후 사업장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제도 개선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대분류	소분류(Package)		과 제 명	비고
건강한 삶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의료원 운영개선 방안 ○ 희귀약품 관리 개선방안 ○ 암정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2000년대 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추진전략 개발 ○ 규격품 대상 한약재 확대방안 ○ 한약가격 적정화를 위한 대책 ○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 한의원에 대한 간호조무사 의무채용제도 개선 ○ 의료사회사업 활동에 대한 통합적 의료보험 수가 마련 ○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p>추진중</p> <p>추진중</p> <p>추진중</p> <p>추진중</p> <p>추진중</p> <p>연구중</p> <p>연구중</p> <p>연구중</p> <p>연구중</p> <p>연구중</p>
		규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 제거 ○ 공중위생법상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의 흡연금지 ○ 방사선 설비의 안전도 검사 및 평가제도 보완 ○ 제3종 전염병 요양소내 만연방지 	<p>완료</p> <p>완료</p> <p>완료</p> <p>추진중</p>

주: 1) 중점 추진과제임.

〈정리: 이필도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전문위원〉